

#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

FOMEK

vol.7 2022.7.1~7.31

\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## 정책활동

-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 (7.18)
  -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투자 및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「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」를 기획재정부에 전달
  - (주요내용) ▲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▲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·인력개발비 공제율 상향 ▲상속세율 인하 ▲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10건

## 정책동향

- [조달청] 2022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조달제품 선정 (7.1)
  - LED등기구, 금속제창, PE관, 사무용가구 등 18개사의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품 184개가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되어 7.1일부터 2년간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 면제
  - \*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, 올 하반기 면제 대상 신청은 9.1일부터 11월까지
- [국토교통부]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(7.6)
  - 선도적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「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\*」 신설 및 ‘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’ 수립·시행
  - \* 신설·강화 규제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적합성에 대해 심의·의결
- [국토교통부]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(7.7)
  - ‘새만금 국가산업단지(5·6공구)’가 국내 최초 ‘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\*’로 지정되어, 2040년까지 RE100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
  - \* (스마트그린 산업단지) 입주기업과 기반시설·주거시설·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,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, 온실가스 배출량의 25% 이상 감축 필요
- [조달청]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(7.7)
  -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, 혁신·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「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」를 발족하였으며, 위원회는 ▲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·과제 확정, ▲규제혁신방안 자문, ▲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, ▲규제혁신 성과평가 등 수행 예정

●● [기획재정부]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(7.8)

-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개 품목\*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(7개) 및 TRQ\*\* 증량(2개) 결정

\* 관세액 50억 이상, 물가가중치 0.5 이상

\*\* 저율관세율할당물량(TRQ) : FTA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,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

●● [고용노동부]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(7.8)

- 제2차 「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」 회의를 통해 현장의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\*을 정비하기로 함

\* ① 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 설치시 방유제(턱) 대신 트렌치 설치 허용, ② 화학 물질 명칭,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

●● [기획재정부]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(7.11)

-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개의 주요 핵심과제\*를 중심으로 업무계획 보고

\* ① 거시·민생경제 안정적 관리, ②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·조정 강화, ③ 규제혁신, ④ 재정혁신, ⑤ 예산편성 방향, ⑥ 공공기관 혁신, ⑦ 세제개편 방향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(7.12)

- ▲성장지향 산업전략, ▲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, ▲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(7.12)

-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해 「2022년도 세계일류상품\*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」 공고('22.7.12~'22.8.26)

\* '현재 세계일류상품' 또는 '차세대 세계일류상품'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마케팅, R&D, 금융 등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및 우대지원

●● [기획재정부]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(7.13)

-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, 각 부처(과기부, 산업부, 환경부 등)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「경제 형벌규정 개선 TF」 출범
-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가능여부 판단 및 개선안 마련 추진

●● [조달청] 초보자를 위한 공공조달 안내서 (7.14)

-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고 편리하게 진입·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등록, 물품등록, 계약, 해외진출 등 공공조달 시장 진입·성장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「초보자를 위한 공공조달 안내서(A에서 Z까지)」 제작·배포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최근 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(7.14)

-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▲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인하, ▲납사·항공유에 대한 한시적 할당관세 도입, ▲경유 사용 운송사업자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도입 등 조치 시행

●● [고용노동부]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(7.18)

- ▲노동시장 개혁, ▲중대산업재해 감축, ▲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

●●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새정부 5대 핵심과제 (7.18)

- 민관협력 기반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확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'새정부 5대 핵심과제\*' 발표
  - \* 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(R&D) 체계 혁신, ② 미래 혁신기술 선점, ③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, ④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, ⑤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등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&D 로드맵 (7.20)

-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&D 로드맵\*」을 마련하고,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총 1.4조원 투입예정
  - \* (R&D로드맵('23~'60))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한 ▲요소기술, ▲국내기술수준, ▲기술개발 일정 및 방법, ▲소요자원 등을 담음

●● [기획재정부] 2022년 세법개정안 (7.21)

- 기획재정부는 7.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'2022년 세법개정안'을 확정·발표
- (주요내용) ▲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, ▲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, ▲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, ▲투자·상생협력촉진세 폐지, ▲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등

●● [관세청] 2021 관세통계연보 (7.21)

-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·징수하는 세금\*을 세목, 품목, 국가, FTA협정별로 분류한 「관세통계연보」를 최초 발간·공표
  - \* 관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농어촌특별세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(7.21)

- ▲기업 투자 지원, ▲인력 양성, ▲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, ▲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「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」 발표
- 배터리, 디스플레이, 미래 모빌리티, 로봇, 바이오 등을 '반도체 plus 산업'으로 묶어 반도체 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

- [고용노동부] 화학·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표 (7.24)
  -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, 기계·기구금속업, 고무제품업 등의 사업장\*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 배포
    - \*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·취급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(PSM) 비대상 사업장
- [국무조정실]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(7.26)
  -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5.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(안)을 검토하고 '지방시대'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하여 「국정과제 관리계획\*」을 최종 확정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 가이드라인 (7.27)
  - 공개 소프트웨어\* 방식의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로 연구자가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는 '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(R&D) 실무 가이드라인' 마련
    - \* 제3자가 소스코드를 사용·복제·수정·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
- [식품의약품안전처]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 (7.28)
  - 중국의 개정 특허법(21.6월)에 따라 도입된 '허가특허연계제도\*'에 관한 담당 행정·사법기관 정보, 개정 특허법 분석 및 특허소송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'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' 발간
    - \*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, 우선품목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
- [기획재정부] 경제 규제혁신 TF (7.28)
  -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역임하고, 정부 및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구성된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출범
  - 그간 관계부처, 학계, 경제계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한 규제혁신과제 50건을 도출하였으며, 경제분야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신속 이행할 계획

## 입법동향

### 1 정부

- [공정거래위원회] 개정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(7.12)
  - 올해 1월 개정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"하도급법")」 및 「하도급법 시행령」이 7.12일부터 시행
  - (주요내용) 원·수급사업자,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상향식 심사절차 마련,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 등

- [금융위원회]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(7.18)
  - 기업과 감사인 간의 지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변경예고('22.7.18~'22.8.26)
  - (주요내용) ▲기업·감사인군(群) 분류 개선, ▲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, ▲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 완화 등
-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7.20)
  - 공장 신·증설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업집적법”）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'22.7.25~'22.9.3)
- [산업통상자원부]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7.26)
  - ▲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 단축(3년→2년), ▲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
- [공정거래위원회] 사건절차규칙 개정 (7.29)
  -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\*하고, 신고인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개선한 「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(이하 “사건절차규칙”）」이 7.29일부터 시행
  - \* 사건 심의 전 위원, 심의대상 사업자, 조사 공무원 등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‘의견청취절차’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

---

## 2 국회

---

-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 의원, 7.1)
  -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를 법률에 명시하고,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심상정 의원, 7.1)
  -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인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,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및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 의원, 7.5)
  -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받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·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회피 방지
-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진 의원, 7.5)
  -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, 냉동식품에 대한 첫 번째 냉동일자 또는 재냉동 일자를 표시하도록 함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 의원, 7.5)
  - 국가인보, 공공이익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할 경우 과제 공모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, 신청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찬 의원, 7.7)
  -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 참여제한,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모든 제재처분에 대해 공개하도록 함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 의원, 7.5)
  -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기준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,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상향하여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도록 함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승재 의원, 7.6)
  -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(授受)를 금지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 의원, 7.20)
  -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 의원, 7.13)
  -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8%로 상향 조정
    - \* (현행) 대기업 6%, 중견기업 8%, 중소기업 16%
-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 의원, 7.15)
  -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,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.5일제 근무 도입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 의원, 7.20)
  -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받고, 주민협의체를 구성·운영 하도록 함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 의원, 7.21)
  -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 의원, 7.21)
  -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 의원, 7.22)
  -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필기 또는 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,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
-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 의원, 7.29)
  -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정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하고,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상향입법하도록 함